

KWDI

해외통신

2018. 11. 3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독일 GERMANY



여성의원 대표성 제고를 위해, 여성할당제 확대 아닌 선거법 개정 추진

채혜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독일 통신원

- ▶ 지난 11월 12일은 독일 여성 참정권 획득 100주년을 맞는 날이었다. 독일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독일 정치 영역 내 여성 대표성이 여전히 크게 부족한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됐다.
- ▶ 현재 독일 정치권에는 13년 동안 독일을 이끌고 있는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총리와 안드레아 날레스Andrea Nahles, 사회민주당SPD, 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대표, 아네그레트 크람프 카렌바우어Annegret Kramp-Karrenbauer, 기독교민주당CDU, Christlich Demokratische Union 사무총장 정도만이 여성 정치인을 대표하고 있다. 독일 언론 도이치벨레DW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독일 연방 정부의 장관직 여성 비율은 43.8%이며 주정부의 장관직 여성 비율은 42.1%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직 비율은 9.6%에 그쳤다.
- ▶ 참정권 획득 100주년 기념행사에 모인 여성 지도자들은 “참정권 획득 이후 여성들의 정치참여가 시작되었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 여전히 독일은 뒤처져있다.”며 “독일 연방의회의 여성 비율은 20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고 각 분야의 여성 대표들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는 독일의 성 평등 문제를 보여주는 증거이다”라고 의견을 모았다.
- ▶ 독일 연방하원인 ‘분데스탁Bundestag’은 2017년 연방 선거 이후 여성 의원 비율이 감소했다. 709명의 의원 중 여성의원 비율은 31%(218석)에 그쳤다. 이에 독일은 세계 여성 대표 순위(전체 193개국)에서 46위를 차지했으며 유럽연합EU 회원국 중에서는 12위를 기록했다. 스웨덴의 여성 의원 비율은 46%이며 핀란드, 노르웨이, 프랑스는 모두 약 40%에 이른다. 과거 독일 연방의회 여성 비율을 살펴보면, 1998~2002년 30.9%, 2002년~2005년 32.5%, 2009년~2013년 32.8%, 2013년~2017년 36.8%로 조금씩 상승해왔다.

참고자료

- <http://www.faz.net/aktuell/politik/inland/angela-merkel-fordert-hoeheren-frauenanteil-in-parlamenten-15887001.html#void>
- <https://www.dw.com/en/in-german-politics-women-still-have-a-long-way-to-go/a-46226146>

- 2017년 총선에서 여성 의원 비율이 줄어든 것은 남성 지배적인 두 정당, 즉 이번 선거에서 처음으로 의석을 확보한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 Alternative für Deutschland’당과 ‘자유민주당’FDP, Freie Demokratische Partei’ 영향이 크다. ‘독일을 위한 대안’AfD’의 여성 의원 비율은 10.9%, ‘자유민주당’은 23.8%다.
- 독일은 여성 정치인 부족 문제를 ‘여성 할당제’Quote’로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지만, 여전히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할당제가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여성 할당제 50%를 주장하는 좌파당Linken과 녹색당Grünen의 경우 여성 비율은 각각 53.6%, 58.2%다. 사회민주당SPD은 후보자와 장관직의 여성 비율 40%를 주장하고 있으며, 이당의 여성 비율은 41.8%다. 카티야 되너Katja Dörner 녹색당 의원은 “할당제는 좋은 제도가 아닌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이라며 “중요한 목표가 있는데 도달하지 못했다면, 새롭고 효과적인 도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녹색당은 ‘합법적 쿼터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 이와 관련해 앙겔라 메르켈 총리를 비롯한 여성 정치인들은 “독일 의회의 여성 비율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했으며, 카타리나 바를레이Katarina Barley 법무부 장관은 새로운 선거법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바를레이 장관은 후보자 명단을 남녀 교대로 채우거나, 직접 선거가 이뤄지는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고 남·여 의원을 각각 선출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 메르켈 총리 역시 연방하원의 여성 비율만을 늘리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는 기독교민주당CDU이 직접 선거에서 승리하는 비율이 높으므로, 여성들이 직접 선거에서 더 많은 기회를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CDU(기독교민주당)/CSU(기독교사회당) 연합은 선거법 개혁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별임금격차 문제의 적극적 공론화를 위한 성별임금 정보공개 강화

곽서희 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 사회학연구기관 국제개발학 박사과정

지난 10월 16일, 핀란드의 유카 마리안바라 Jukka Maarianvaara 평등정책 옴부즈만 Ombudsman for Equality, Tasa-arvoaltuutettu 은 아니카 사리코 Annika Saarikko 가족사회서비스 장관 Minister of Family Affairs and Social Services 에게 임금 공개성 pay openness 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평등정책 | 옴부즈만은 독립적 권한을 갖고 1986년 제정된 남녀평등법 Act on 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 이행을 감독하고 불평등한 행위에 대한 피해 접수 및 해당 기관에 개선을 권고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유카 마리안바라는 이번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여성 근로자에게 가장 큰 장애물은 임금에 대한 정보 부족”이라고 지적하면서, “근로자의 임금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금 투명성 제고가 임금 차별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사실 핀란드에서 임금 투명성은 그동안 꾸준히 논의되어 왔던 주제이지만, 실제로 소수의 기업에서만 임금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을 채택하여 이행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한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임금에 대한 정보가 비공개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임금격차 문제를 제기하는 것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본 옴부즈만 보고서에서는 임금격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임금, 그리고 임금격차에 대해 보다 개방된 논의 open discussion 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핀란드 통계청 Statistics Finland, Tilastokeskus 에서 11월 14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남녀임금격차가 평균 약 16%를 기록했다. 남성이 1유로를 벌 때, 여성은 84유로센트를 번다는 것이다. 그리고 | 임금격차를 고려하면 올해 11월 2일을 기점으로 12월 31일까지 여성 근로자는 무임금으로 일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한다. 10월 31일이었던 작년어에 비해 올해 이를 늘어나고 임금격차는 약 0.5% 정도 줄어든 수준이라고 한다.

통계청의 발표 이후, 19개 노동조합 unions 로 구성되어 있고 약 64만 명의 임금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핀란드 근로자노동조합연맹 Finnish Confederation of Salaried Employees, Toimihenkilökeskusjärjestö (STTK) 의 카타리나 물토 Katarina Murto 소장은 이후 한 해의 데이터만으로는 임금격차 개선을 예측할 수 없으며 “남녀임금격차는 달팽이가 기어가는 속도 수준으로 개선되고 있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가족 휴가 family leave 제도 개선이다.”라는 입장을 발표했다.¹⁾ 핀란드 전문직노동조합 STTK 측은 육아휴직 parental leave 제도 개정 외에도 남녀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임금 투명성 강화방안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다양한 로비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1) 핀란드 근로자노동조합연맹(STTK)는 영어로 Finnish Consideration of Salaried Employees 또는 Finnish Confederation of Professionals 라고 번역되기도 하나, 연맹 소속 노동조합 및 조합원은 특정 수준이상의 전문직종에 한정되지 않고 엔지니어, 간호사, 경찰, 사무직등 광범위함.

참고자료

-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 (2018), "More efficient means needed to achieve pay equality," 2018년 10월 16일자 https://stm.fi/en/artikkeli/-/asset_publisher/palkkatasa-arvon-saavuttaminen-vaatii-tehokkaampia-keinoja (접속일자: 2018년 11월 23일)
- Statistics Finland, "Gender equality," http://www.stat.fi/tup/tasaarvo/index_en.html (접속일자: 2018년 11월 23일)
- Yle (2018), "Slight progress in Finland: Equal Pay Day nudges forward into November," 2018년 11월 2일자 https://yle.fi/uutiset/osasto/news/slight_progress_in_finland_equal_pay_day_nudges_forward_into_november/10490451 (접속일자: 2018년 11월 23일)
- Yle (2018), "Ombudsman urges pay transparency to fight gender pay gap," 2018년 10월 16일자 https://yle.fi/uutiset/osasto/news/ombudsman_urges_pay_transparency_to_fight_gender_pay_gap/10459311 (접속일자: 2018년 11월 23일)
- Yle (2018), "Minister: Family leave reform a must, wage gap closure 'matter of time'," 2018년 11월 17일자, https://yle.fi/uutiset/osasto/news/minister_family_leave_reform_a_must_wage_gap_closure_matter_of_time/10513439 (접속일자: 2018년 11월 23일)

반면, 현재 재무 장관^{Minister of Finance}이자 국가연합당^{National Coalition Party, Kansallinen Kokoomus (KOK)} 대표인 페테리 오포^{Petteri Orpo} 장관이 남녀임금격차 문제에 대해 언급한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지난 17일 핀란드공영방송 Yle TV1 한 아침 뉴스 토크쇼에 출연해서 육아휴직, 출산율 등의 이슈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그 중 남녀임금격차 문제가 언급되자 오늘날 여학생, 그리고 여성의 교육 성취도를 고려하면 임금격차가 해결되는 것은 시간문제^{a matter of time} 이라고 발언했다. 이어 그는 “곧 우리는 남성 임금을 걱정하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아직 핀란드 사회에서 남녀임금 격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 재무 장관이 위와 같은 발언은 향후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일 수 있다. 남녀임금격차 문제 개선방향에 대한 옴부즈만 보고서가 정부에 제출되고 계속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만큼, 핀란드 정부에서 앞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행보를 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스웨덴 SWEDEN



초·중·고 학교의 성평등 교육 실시, 성교육도 성평등 관점에서의 통합 교육으로 운영

홍희정 울산대학교 젠더연구소 센터 연구원

- 스웨덴은 1998년 교육법을 개정하여 모든 학교에서 성평등 교육^{Gender Equality Education}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고, 2018년 현재 모든 교육과정에 성인지적 관점^{Gender Perspective}이 반영되어 있다.
- 스웨덴의 성평등 교육은 1955년 초·중·고등학교에서 성교육^{Sex Education}을 의무화함에 따라 처음 시작되었다. 당시 스웨덴은 기독교 사상에 바탕을 둔 보수적인 성교육을 실시하였지만, 여권이 신장되면서 다양한 내용의 성평등 교육을 함께 실시하고 있다. 성교육 실시 이후 교과과정^{Curriculum}에서 성 역할에 대한 고정 관념이나 성 차별적 내용이 점차 빠지게 되었고, 성별에 상관 없이 개인의 능력과 흥미를 개발 시킬 수 있는 내용들로 교과과정이 재구성되었다. 특히, 1997년 개최된 제4차 UN 여성대회 후속조치로 1998년 스웨덴 교육법을 개정하였고, 이를 통해 스웨덴의 모든 초·중·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2011년부터는 정규 학교 교과과정뿐만 아니라 고등교육과 성인교육 등 모든 교육기관의 교과과정에 성인지적 관점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참고자료

- <https://www.skolverket.se/regler-och-ansvar/skollagen-och-forordningar>
- https://www.skolverket.se/sitevision/proxy/publikationer/svid12_5dfee44715d35a5cdfa2899/55935574/wtpub/ws/skolbok/wpubext/trycksak/Blob/pdf3580.pdf?k=3580
- <https://www.skolverket.se/skolutveckling/inspiration-och-stod-i-arbetet/stod-i-arbetet/sex-och-samlevnad>
- <https://www.thelocal.se/20110712/34880>

2011년 이후 스웨덴 성교육은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 다양한 과목 내에서 통합적인 주제와 내용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가령, 초등학교 4~6학년의 교과과정을 살펴보면, 생물학 시간에는 사춘기, 2차 성징 및 생식능력과 그에 따른 정체성 형성, 남자와 여자의 관계 형성 등에 대해 학습한다. 그리고 종교 시간에는 개인의 정체성과 역할, 성 정체성, 성 차별이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학습하고, 사회 시간에는 다양한 가족 형태와 동거 유형에 대해 배운다. 또한 미디어와 광고에서 젠더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대중문화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학습하게 된다. 이는 성평등 교육이 별도의 학습 영역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일상 학교생활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토론하고 논의할 수 있게 해준다. 둘째, 대화와 토론을 통해 젠더 주제에 대해 고민하고, 서로의 관점을 공유해야 한다. 예를 들면, 스웨덴은 한 달에 한번(학교마다 다를 수 있으나 1회 이상 반드시 실시) 수업시간에 사용하는 교구, 학습 내용뿐만 아니라 수업 시간에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이 성평등한 관점에서 제시되고, 해결되었는지에 대해 평가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때 특정 교구가 특정 성별을 중심으로 활용이 되었거나 수업 중 성역할 고정 관념이나 성희롱 언어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등을 점검한다. 만약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면 반드시 적절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셋째, 특별수업이나 행사를 통해 성평등 교육을 다각화해야 한다. 가령, 세계 여성의 날, 세계 에이즈의 날, 세계 인권의 날 등 특별한 국제 기념일과 성평등 교육을 연계하여 민주주의 사상에 기초한 평등과 인권 사상이 성평등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개인과 사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1년 당시 스웨덴 사회통합 및 평등부 장관이었던 니암코 사부니(Nyamko Sabuni)는 “성교육은 성평등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며, 이는 성폭력과 성희롱을 근절하고,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성교육을 생물학의 일부분으로 생각하는 것은 근시안적이며, 반드시 성교육은 성평등의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스웨덴은 기존의 성교육을 성평등 교육과 연계하기 위해 약 10만 크로나(한화 약 12억 3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였고, 2018년 현재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모든 교육기관에서 모든 교과과정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는 국가가 되었다.



여학생에 대한 복장 규정 적용, 성차별 논쟁으로 확산

김양숙 캐나다 토론토대학 사회학 박사과정

북미에서 최근 몇년간 이어지고 있는 드레스코드를 논쟁에 다시 불이 붙었다. 11월 캐나다 뉴브런즈윅주의 페레더릭턴시(Fredericton, New Brunswick) 소재의 성 토마스 대학(St. Thomas university) 학내 헬스클럽에서 크롭탑 (배꼽이 노출되는 짧은 상의)을 입은 여학생에게 남성 직원이 시선을 끄는(distracting) 의상은 부적절하다며 대학에서 크롭탑을 금지하는 규정을 논의 중이다. 앞으로는 크롭탑을 입고 헬스클럽 시설을 이용하지 말라고 학생에게 무안을 주며 경고한 사건이었다. 부당한 수모를 당했다고 느낀 해당 학생은 곧장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남학생들은 옆구리가 보이는 민소매를 입거나 아예 상의를 입지 않고서도 교내 헬스클럽을 이용하는 반면 여성에게는 무엇이 적절하고 무엇이 부적절한 것인지에 대해 강요한다며 본 사건을 제기하였다. 이 포스트가 빠르게 퍼져나가며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자 대학 당국은 교직원이 학생에게 무안을 준 것에 대해 부적절한 대응이었음을 인정하며 해당 학생에게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였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학 당국은 교내 헬스클럽에서의 드레스코드를 논의 중인 것은 사실이나, 운동기구를 땀에 오염되지 않게 하기 위한 공중보건 차원의 논의이지 특정 성 관련(gender specific) 의상 제한 조치를 고려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캐나다에서 복장 규정, 특히 여학생의 복장을 둘러싼 논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근 몇 년간 산발적으로 여학생들이 성차별적인 교내 의상규정에 대해 집단적으로 저항해 왔다. 올해 온타리오(Ontario) 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감이 남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실에서 여학생들을 일어서게 해 치마 길이를 점검하였다. 학생들은 미투(#MeToo) 해시태그로 공유, 여학생들에게 공개적으로 수치심을 준 것에 대해 학교 측의 공개 사과를 받아낸 사건이 있었다. 2015년에도 이른바 “크롭탑의 날”에, 토론토의 한 고등학생이 민소매에 허리가 드러나는 상의를 입고 등교하여 교장실에서 “의상이 부적절하며 브라를 입은 것 같다”는 질책 받은 내용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린 후, 토론토 각지에서 고등학생들이 단체행동의 의미로 일제히 크롭티를 입고 등교하여 여성의 몸에 대해 남성의 시선에서 재단하고 통제하려는 시도에 공개적으로 저항한 바 있다. 이 여학생들은 자신들의 크롭탑과 민소매 등에 항의 메시지를 적고 소셜미디어에 해당 사건을 공유한 학생의 학교로 모여 토론토 교육청으로 행진하며, 레깅스는 너무 꽉 낀다는 이유로, 민소매와 짧은 치마는 신체가 과도하게 드러난다는 이유로 여학생들에게만 유독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출이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시킨다는 논리 또한 성적 충동을 절제하지 못하는 남성들의 문제를 여학생들에게 부당하게 전가한다는 주장을 언론을 통해 펼쳤다.

참고자료

- The Globe and Mail, Ontario high-school incident highlights dress code tensions in the age of #MeToo, <https://www.theglobeandmail.com/canada/article-ontario-high-school-incident-highlights-dress-code-tensions-in-the-age/>
- The Star, Toronto students organize 'Crop Top Day' to protest dress codes, <https://www.thestar.com/yourtoronto/education/2015/05/26/toronto-students-organize-crop-top-day-to-protest-dress-codes.html>
- Times Colonist, Rules eased in new schools dress code, <https://www.timescolonist.com/news/local/rules-eased-in-new-schools-dress-code-1.23286396>
- CTV News, Dress codes a contentious issue for some parents as school years begins, <https://toronto.ctvnews.ca/dress-codes-a-contentious-issue-for-some-parents-as-school-year-begins-1.3561472>

이렇게 최근 학생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지만 이에 상응하는 변화는 더디다. 캐나다 학교의 복장 규정은 대부분의 주에서 관할 교육청(District school board)에서 정하는 매우 개략적인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개별 학교 교장이 지역 정서와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별 학교 교장이 재량껏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변화하는 학생들의 인식과 달리 수년간 복장 규정이 그대로인 곳이 많다.

그런데 올해 5월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British Columbia) 교육청(the Greater Victoria school board)의 경우 복장을 둘러싼 개별학교들의 규정을 통괄하는 상위 규칙을 강화하기로 하였는데, 이 상위 규칙들에 의상을 선택하는 것은 개인의 정체성 표현(individual expression of identity)임을 명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결정은 2016년부터 브리티시 콜롬비아의 16개 공립학교들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도출된 것이며 매년 검토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의 개별 학교들은 학교에서의 복장을 일관되게 규율하는 상위 차원의 규정에 근거하여 복장을 규율하게 되며, 특히 여학생들에게만 더 엄격한 복장 규정을 들이대지 않도록 하는 성평등 원칙이 적용될 예정이다. 주 교육청 측은 교육청 수준에서 개인이 무엇을 입을 수 있고 없고를 정하는 것은 성평등의 원칙과 특정 그룹(인종, 성별, 성소수자 등)에 대한 차별 금지의 원칙, 그리고 약물이나 음주를 부추기는 표현 금지의 원칙은 반영될 것이라 밝혔다.